

정의화 - 청와대 경제법안 '직권상정' 충돌

정 의장 "경제 비상사태 아냐" 청와대 요구 거부 여 "대통령 긴급명령권 검토" ...야 "독재적 발상"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각종 주장을 쏟아내면서 온 나라가 들쭉거리고 있다.

여야가 기본적인 협상의 기능마저 상실한 가운데 법안 처리가 끝없이 표류하자 입법부 수장의 비상조치권인 국회의장 직권상정, 헌법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명령권까지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헌기한 정부수석을 통해 야권 분열로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현행 국회의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의 입법마비 상황에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 처리 지연은 국가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만큼 직권상정을 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정 의장은 16일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또 정 의장은 현 수석의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쟁기"라는 전날 발언에 대해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도 이날 오후 정 의장 집무실을 찾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 '직권상정 요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이뤄진 면담에

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법으로 방파제를 삼아야 한다"면서 "또 최근 파리 테러도 있었는데 테러방지법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선진화변 때문에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 여러분도 그 법이 통과될 때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5분 만에 집무실을 박차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 의장의 태도가 완강하자 새

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선을 그은 사안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분이 심각한 야권에서는 청와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직권상정 촉구)는 의회 모독이자 입법권 침해"라며 "삼권분립 파괴이자 국회를 위반하는 범죄적 행태이고, 민주주의

의 질을 깎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청와대는 대체 어떤 '국가비상사태'를 주장하는 것이냐"며 "군부시절 똑같은 이유로 유신 독재를 하지 않았느냐. '응답하라 1970'으로 돌아간 듯하다"고 거들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정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결핍하면 국회 심판권을 들먹이고 있다"며 "이토록 무책임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 앞에 이토록 오만한 대통령이 있었느냐"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금 경제상황 비상사태 수준은 아냐"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의 입법 지연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의장은 청와대의 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연합뉴스

文 "혁신 을인...난국 정면 돌파"

상향식 공천혁명 선언...최재성 불출마 선언으로 측면 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비주류의 문 대표 사퇴를 등 당내 투쟁을 좌시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또 조기에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상향식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탈당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저는 박근혜정권을 신(新) 독재

로 규정한다. 그간 보수정권이 아니라 수구·극우정권으로 규정한다"며 "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신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갈지 모른다. 이런 정권을 연장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저 자신부터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반드시 혁신을 이뤄내고 말겠다"고 밝힌 뒤 "혁신을 공천권 다툼이나 당내 권력투쟁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단없는

혁신을 해나갈 것이다. 어떤 요구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국민공천제를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공천에서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며 "당 대표의 공천 기득권이나 계파 패권적 공천은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을 빠른 시일 내에 일사불란한 총선 승리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총선기획단, 총선정책공약준비단, 통합적인 선대위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

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내 투쟁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비주류의 대표적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 주도로 당을 총선 준비체제로 전환하는 등 '마이웨이'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표의 새로운 측근으로 통하는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이르면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총선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발(發) 인적 색인이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연령 '18세 조정' 공론화

새누리 "검토 가능"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조건의 하나로 19세인 선거연령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내년 4·13 총선에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의화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지도부 선거구획정 협상에서 여당이 선거연령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인정했다.

원 원내대표는 다만 이 같은 선거연령 인하는 "쟁점법안 처리와 연계할 때의 조건이었으며, 적용시점을 정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연령 인하 요구에 대해 만 18세 가운데 상당수가 고교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의미있는 태도변화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고, 경제대국이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하는 선거연령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인 곳은 32개국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과 폴란드가

각각 19세와 21세로 다른 회원국보다 선거연령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20대 총선이 치러지는 2016년 기준 만 18세 인구는 63만 184명으로 추계됐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투표율(54.2%)을 적용한다면 34만1560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18세 인구는 61만 1709명에 달한다. 지난 대선 투표율(75.8%)대로라면 46만3675명이 추가로 투표에 나서게 되는 셈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2005년에도 선거연령을 한 차례 낮췄다. 민법상 성인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선거연령도 인하한 것이다. 당시에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아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길 원했으나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반대로 19세에 합의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인하에 난색 하는 이유는 젊은 층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18세 인하 검토 카드를 내놓은 것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들어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젊은 층에서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野 분열정국 '거리두기'

정치행보 질문에 미소만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위기 등 야권의 엄중한 상황에 '거리두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지난해 8월부터 1년 4개월 가량 전남 강진의 토담집에서 침거 중인 손 전 고문은 16일 안 의원의 탈당과 손 전 고문의 역할 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와 웃음으로 답을 대신하는 등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일체의 언행을 보이지 않았다.

토담집에서 산길로 10여분 걸어 내려와 백련사 '공양간'에서 점심을 먹은 손 전 고문은 "안 의원이 내일 광주를 방문하는데 소식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야권에서 손 전 대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질문에도 가벼운 미소를 지을 뿐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손 전 고문은 "강진의 산이 나가버려" 하면 내려오신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지겹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웃음으로 일관했다.

손 전 고문은 공양간 마당에서 김장을 담그는 보살들과 마을 주민들을 보고 "수고한다" "올해는 김장을 몇 포기 담그느냐" "요즘 배추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격려를 했다.

손 전 고문은 한겨울에도 매일 아침 토담집 마당에서 냉수마찰을 하고, 아침, 저녁은 집에서 과일과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점심 한끼만 공양간에서 한다고 한다.

손 전 고문 측은 "손 대표가 언론에 일체 정치적으로 해석될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